

 행정안전부	보 도 자 료	작성과	행정안전부 일자리추진단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노동부 고용전략과
	2010년 3월 4일(목) 석간 (1200) 부터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연락처	안경원 2100-8581 권재관 2150-2811 배영일 2902-8183

대통령 주재, 지역일자리 창출 지자체장 회의 개최

I 회의개요

- 정부는 '10년 3.4(목) 오전 10시, 대통령주재로 246개 자치단체장, 관계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3차 국가 고용전략회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참석대상(총271명) : 246개 지자체장, 기재부·행안부·노동부장관 등 부처장관, 한나라당 정책위의장, 교수 등 외부전문가, 현장 종사자 등

- 이번 회의는 '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**일자리창출**을 위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결집하고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
- 회의안건은 ①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(기재부장관), ②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(행안부장관), ③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(노동부장관), ④ 지자체 우수사례 4건입니다 (서울 청년창업프로젝트, 경기 일자리종합센터, 구미 We Together운동, 장흥 無酸김 주민주식회사)

II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

-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를 조기에 **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**하고, 중앙·지방,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,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,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
- 10대 정책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,
그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『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』 추진

- 더 많고, 더 좋은 지역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 지자체의 **경상경비·축제성 경비를 절감**하여 5월까지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, 이를 통해 마련되는 **3천억원을 투입,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** 신규 창출할 계획입니다.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 추경편성과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**7월부터 시작**되며,
 - 자전거 수리 사업, 도시숲 조성,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,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**희망근로 종료(6월)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②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

-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미설치지역(149개 시군구)에 대해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상담 및 알선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업 은퇴자, 직업상담사 등을 배치하고, Work-Net(국가직업정보망)을 연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취업상담을 One-stop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취업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할 방침입니다.
- 또한,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‘취업박람회’, ‘Job 페스티벌’ 등을 개최하고, 지자체별로 ‘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.

③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산

- 금년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·등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(50%) 제도를 타 지역에 확산하고,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금지원,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.
- '12년까지 3년간 3천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를 금년 7월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고,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.

④ 공공부문 일자리 구조개선과 정보·통계시스템 정비

- 현재 부처별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금년 상반기중 통·폐합하는 한편,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,
 - IMF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온 공공 근로사업에 대해 금년 상반기 중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.
-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수혜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일자리 사업도 6월까지 '일모아시스템'에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고, 지자체의 Work-Net 사용권한과 조회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현재 통계청 주관 고용통계가 연 1회만 시군구단위로 작성되어 시군구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, 이를 앞으로 분기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⑤ 일자리 공시·실적 평가를 통한 지역간 경쟁촉진

-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달곤)는 금년에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여 상·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,
- 내년도 일자리사업(사회적 기업,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) 국비 지원시에도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.

III 서울시, 경기도 등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

- 서울특별시는 “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”를 통해 20~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설, 장비,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청년실업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※ 사업자 등록 438개('09.6월 3,100명 지원 1,021명 선발)
- 경기도는 2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취업 상담 및 알선, 사회복지급여 등 원스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경기일자리센터」를 지난 2월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구미시에서는 「We Together 운동」을 통해 노사민정이 범시민협약을 체결하고, 시는 운전자금을 융자지원(이자 5% 지원)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
* 364개사가 참여, 1,295명 고용창출
- 끝으로,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어민 주도로 ‘무산김 주민주식회사’를 설립하여, 생산·가공·유통 단계를 일원화,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(직접고용 40명, 간접고용 200명)
* ‘無酸 김’ 양식을 시도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

붙임 : 1.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방안(행안부)
2. 지자체 우수사례(서울, 경기, 구미, 장흥)

- 행정안전부·기획재정부·노동부 -

“2010년 3월4일(목) 석간 (12:00 이후) 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”

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 보도 참고자료

- ‘10.3.4(목)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「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」을 주제로 시·도지사(16명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230명)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

* 주요 안건 : ① 현 고용상황 평가 및 향후 고용대책 방향(기획재정부)
②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(행정안전부, 노동부) ③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(노동부, 동영상)

- 행정안전부와 노동부가 마련한 「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」 중 노동부와 관련된 주요 대책은,

- 희망근로사업 종료 이후에는 「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」(일자리 3만개)을 추진하고,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
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유사·중복 사업을 통폐합하여 효과성 제고
-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확대하고,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·협력 강화
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관리하는 「일모아 시스템」에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, 노동부 워크넷과 지자체 취업정보시스템과 연계 강화
- 통계청과 협의하여 시군단위의 고용통계조사를 연1회에서 분기단위로 확대 등

- 한편,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련 동영상*을 상영하여 사회적 기업의 의의·중요성을 알리고,

* “건강한 공동체, 더 큰 대한민국, 사회적기업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.”

- 사회적 기업 육성이 ‘제2의 새마을운동’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

<붙임 1>

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

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

2010. 3.

행 정 안 전 부
노 동 부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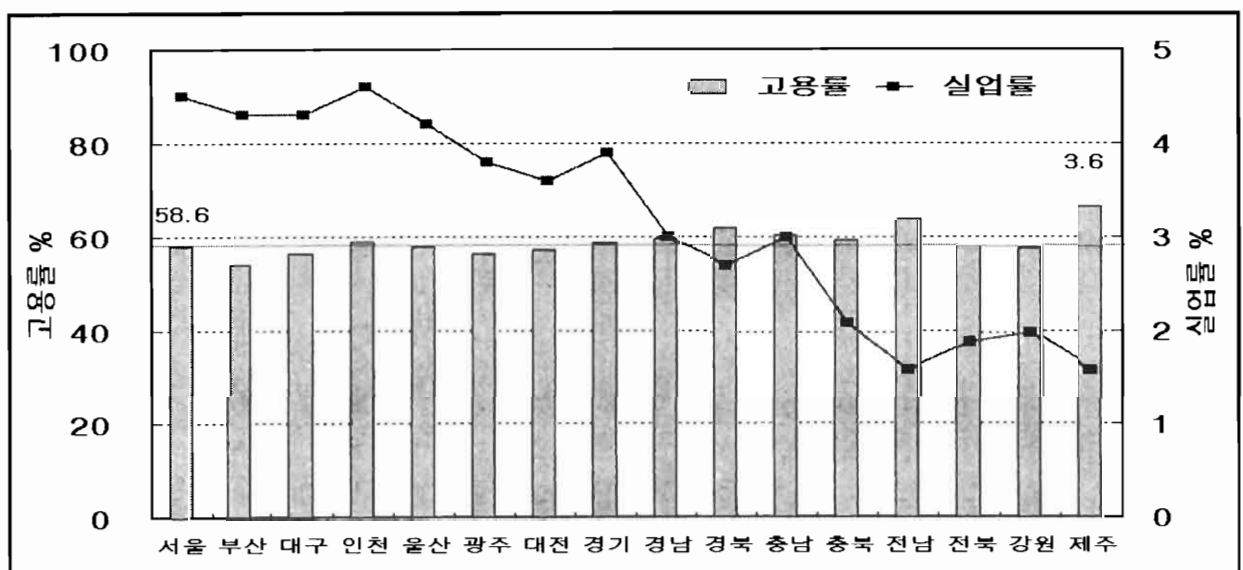
I . 지역일자리 동향 및 평가	1
II . 추진목표 및 과제	3
III . 부문별 일자리 활성화 방안	4
IV . 지원체계 및 제도 정비	11

1 '09년 지역일자리 조성대책의 성과

- 글로벌 경제위기로 '08.12월 취업자 수가 '03.12월 이후 첫감소
 * 취업자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 : ('08.11)+7.8 →(12)△1.2 →('09.1)△10.3 →(10)+1.0
-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부터 '공무원 급여반납',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'일자리 나누기 운동' 전개
- 일자리 위기관리정책(희망근로 프로젝트 등)을 선제적으로 시행하여 최악의 실업사태 예방,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상당한 성과 거양
 - 전국 246개 자치단체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및 재정조기 집행
 - 정부일자리 추경에 따른 지자체 매칭 추경, 희망근로사업의 성공적 추진

2 '10년 지역일자리 여건

- '10년 경제성장률은 4~5%로 전망,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
- 부산,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高실업·低고용 현상
- 지역산업여건, 지자체 노력에 따라 지역간 고용차이 발생



* 자료 :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'09년)

3] 지난 2개월간의 추진노력

- ◆ 대통령께서 일자리 창출을 '10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천명 (1.4 신년국정연설)
 - 매월 '국가고용전략회의' 개최
- ◆ 행정안전부는 「'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중점추진 대책」 시달 (1.21)
 - 매월 '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' 개최, 추진체계 구축

○ 추진체계 구축

- 16개시도 및 230개 전 시군구에 「일자리 추진단」 구성
- 시도별 자체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개최

○ 일자리 예산의 추가확보를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·축제성 예산 절감 계획 수립 중

○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대책 추진 중

【지자체 일자리대책 사례】

- 서울시 '2030청년창업 프로젝트', 경기도 '일자리종합지원센터' 개소(2.1)
- 희망근로 활용한 취업지원(울산 동구), 주민주식회사 육성지원(전남)

4] 반성 및 추진방향

- 재정지원형 임시 일자리 사례 ➡ 효과분석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제공
- 단순취로형 일자리 제공 ➡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창출
- 일부 사업유형의 유사·중복 ➡ 사업대상의 구체적 정책타겟 설정, 효율화 도모
 - ※도시는 청년창업, 농산어촌은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특화해서 추진
- 중앙정부 주도의 정형화된 일자리 정책 ➡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

II

추진전략 및 과제

추진목표

더 많고, 더 좋은 지역일자리 조성

— 지자체 재정 투입확대, 지역일자리 최소 3만개이상 추가조성 —

추진전략

◆ 지방의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, 일자리 체제로 전환

◆ '중앙-지방, 민간-공공'간의 협력체제 강화

◆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간 경쟁촉진

추진과제

공공부문

- ① 생산적 '희망근로 프로젝트' 추진
- ② Post-희망근로 : 「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」 추진
- 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
- ④ 「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」 육성

민간부문

- 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위한 지자체 역할강화
- ②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
- ③ 「청년창업 프로젝트」 확산

지원체계 제도정비

- ①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
- ② 일자리 정보·통계시스템 정비
- ③ 지역별 일자리실적 공시·평가

Ⅲ

부문별 일자리 활성화 방안

1

공공부문 일자리 창출

과제 1 생산적 '희망근로 프로젝트' 추진

□ 10대 생산적·親서민적 사업에 중점

- 다문화 가족지원,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공장진입로 정비 등 10대사업 집중추진

※ 사업기간 : '10.3~6(4개월), 사업비 : 5,727억, 참여인원 : 10만명

□ 소기업·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제공

-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에 희망근로자 취업지원(5,000명)
- 신청자와 기업체간 「만남의 장」 정례적 개최

【울산시 동구 사례】

- 지역 중소기업과 MOU 체결, '희망근로-중소기업 만남의 날' 개최
- 희망근로 종료 이후 참여자 50% 이상 정규직 고용 의무화

□ 농촌, 산업단지 지역일손부족 대책마련

- 취약계층위한 농기계지원 추진단, 농촌 일손지원단(1,290개) 운용
※ 농번기에 희망근로 일시중단 등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운영
- 산업밀집 지자체에 대한 희망근로예산 감축배정('10.2)
- 당초 예산의 10% 감액배정(울산 안산 당진 등 국가산단 소재 11개 지자체)

□ 희망근로 신청 탈락자(36만명) 취업지원 대책

- 청장년층은 「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」에 우선 흡수, 노년층은 자활·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알선·안내

【연계 일자리사업 유형】

-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('10.7~12) : 지자체 예산절감분 3천억원 (3만개)
- 노인일자리사업('10.3 ~) : 노인일자리사업 중 약40% 활용 (19만개)

- 워크넷 구직등록,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

과제 2 Post-희망근로 : 「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」 추진

《 추진방향 》

- ◆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연계로 고용시장 충격완화
- ◆ 사업종료(6개월)후 「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」으로 발전

□ 사업개요

- 사업규모 :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
- 사업기간 : '10. 7 ~ '10. 12 (6개월)
- 소요재원 : 3,000억원 (지자체 경상경비 및 축제예산 절감분 5% 활용)
- 참여대상 : 청장년실업자 우선 고용

【 지역별 특화된 사업유형 】

구 분	주 요 내 용
대도시형	▶ 자전거 수거·수리센터 운영, 도시숲 조성
중소도시형	▶ 생활형 자전거 길 조성, 동네마당 조성
농어촌형	▶ 명품녹색길(Green Way) 조성(생태길, 오솔길) ▶ 관광자원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마을발전사업 등
접경지역형	▶ DMZ 자원조사(생태계조사, 유적조사) 등

□ 추진방안

-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유형 및 사업모델 마련('10.3)
 - 국내·외 성공사례를 유형별 분류 및 운영 방식 제시
- 농어촌 마을갯길 도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추진('10.7)
 - '사고다발 구간', 중장비 동원이 필요없는 '차·보도 분리사업' 분야에 집중
 - ※ 보행중 사망자 현황 : 전국평균 4.24명, 군단위 평균 8.77명(인구 10만명당)
- 지자체 사업종료 후 지역별 명품자원 조성('10.12)
 - 명품 녹색길, 생태관광 자원화(지리산 둘레길, 무등산 옛길)등 지역단위 새로운 명소로 개발

과제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

□ 문제점

- 現 10개 부처, 179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중
 - ※ 179개 사업 : 직접재정지원사업(117개), 교육훈련사업(62개)
 - 부처별 유사·중복 사례 발생 등 비효율성, 일선의 혼선초래
 - * (예) 방과후 프로그램 : 교과부, 보건복지부 등 다수부처 시행
 - 지역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업운영
 - * (예) 단위사업별 칸막이 지침
- 공공근로사업 :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(연 2만명, 1,620억원)
 - IMF이후 타당성 분석없이 복지차원의 단순 취로사업으로 운영
 - * (예) 풀뽑기, 쓰레기 줍기 등 비생산적·1회성사업 치중

□ 개선방안

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성격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분류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유사·중복사업 통폐합

[서울시 사례 : 공공일자리 구조조정]

 - 37개 사업부문 → 사업효과성을 기준으로 23개 사업부문으로 재편성
 - 단순노무 중심 →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생산성 높은 일자리로 전환
 - 수익성 높은 사업(청소사업단, 산모도우미) → 사회적기업 육성
- 사업대상영역 조정, 보조금지원방식 개선 등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방안 검토
 - ※ 부처간 협의(상반기) 후 하반기 시행목표로 추진
- 공공근로사업 : '취약계층 자활기반사업'으로 전면개편
 - 취약계층을 위한 일시적 취로사업은 일정부분 유지하되,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, 정책타켓 개선
 - 사업필요성 등 비용효과분석(상반기)→ 사업 재설계(하반기)
→ 개편방안 시행('11년)

과제 4 「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」 육성

〈 추진방향 〉

- ◆ 지역의 특성·자원을 활용,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
- ◆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
- ※ 취약계층 대상의 수익창출형 사업은 「사회적 기업」으로 육성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'10. 9 ~ 12 (4개월)
- 사업규모 : 1시군구 1개 시범사업 추진(230개, 3,500명)
- 사업비 : 176억원 (국비 88억, 지방비 88억원)
- 지원방법 : 사업정착을 위한 재료비, 운영비 등 일부지원

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사례 】

지 역	유 형	내 용
전남 순천시	시니어 공동체	▶ 노인회주축 자연염색, 미생물활성액 제조·판매 ▶ 연 5천만원 매출, 노인 90명 고용
전남 장흥군	‘김’주민주식회사	▶ 지역의 특화 자원인 ‘무산김’을 활용, 양식어민이 출자한 주민주식회사 운영 ▶ 110명의 지역어민 출자, 고용 40명
전북 완주군	향토마을 사업단	▶ 황토찜질방, 전원형숙박, 특산물 판매 등 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추진 ▶ 월 4천만원 매출, 고용 62명

□ 추진방안

- 시범사업 평가 후 안정적 주민주도형 사업모델로 발전
 - 대도시형, 중소도시형 등 지역별 추진 가능한 사업모형 마련('10.4)
 - 연차별 사업규모 확대 : 230개('10년)→ 300개('11년)→ 400개('12년)
- 사업의 초기 정착을 위해 자원발굴,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
 - 주민대상 사업공모 → 자립성 심사·평가→개발지원 통해 사업육성

【협력주체】

- 지역주민 :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, 공동체 형성
- 행정지원 : 주민공동체사업 정착을 위한 초기 사업비 등 일부지원
- 경영지원 : 농협·새마을금고 등의 자금지원, 상공회의소 등의 컨설팅

과제 1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위한 지자체 역할강화

《 추진방향 》

- ◆ 고용지원센터-지자체 협력을 통한 효율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 - 고용지원센터 : 미스매치 해소 Hub기관화, 기간인력 취업알선·훈련 중점
 - 지자체 : 취업애로계층 및 공공일자리 중심, 고용·복지서비스 통합 제공

□ 취업 상담·알선 시스템 강화

○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확대

- 고용지원센터 설치지역(81개소) : 고용지원센터와 연계·협력 강화
- 고용지원센터 미설치지역 : 지자체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
 - ※기업은퇴자 등 활용한 '기업애로 상담사' 배치

○ 읍면동 주민센터를 취업지원 최일선 창구로 활용

-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상담과 취업상담을 One-stop 지원
 - ※읍면동 취업담당 공무원대상 전문성향상 교육(노동행정연수원)
-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지원 역할로 발전

【동작구 사례 : 주민센터에 취업창구 개설】

- 전담직원 및 직업상담사(공공근로) 1명 배치 : 취업상담·알선
 - 3,624건의 상담을 통해 839명의 구직 연결('09년)

□ 취업 교육·훈련 확대

- 지자체의 직업훈련학교 교육과정·대상·내용별 특성화 추진
 - 서울시의 4개 직업학교를 '서울형 Job Academy'로 개편사례 모델화(5월)

□ 구인·구직 교류의 장 마련

- 지역별 취업박람회, Job 페스티벌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회 확대
- 구인기업 발굴을 위한 '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' 운영

【구로구 사례 : 전담발굴반 운영】

- 구인업체 전담발굴반(5개조 25명) 운영
 - 1,849개 구인업체 발굴, 2,139명 취업알선 결과 937명 취업 ('09년)

과제 2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

□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차등지원

- 고용증대 지역기업에 지방세(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)감면 추진
※대구시 50% 감면사례 ➡ 전국 확산 유도
- 경영안정자금 한도증액, 이차보전 우대 및 저리 경영자금융자 실시

【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사례 】

지 역	대상기업	지 원 내 용
대구시	총고용 3%이상 증대기업	▶ 경영안정자금 한도(3억→5억) ▶ 이차보전 (2%→3%)
경기도	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, 소상공인	▶ 초저리 경영자금(3.8%)융자, 보증수수료 감면 ▶ 중소기업 5억원,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
충청남도	지역소재 대학졸업자 고용 모범기업	▶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(1%) ▶ 기업육성자금 평가시 가점부여(5점)

- 지역주민 채용기업에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

【완주군 사례 : “완주군 투자유치촉진 조례”시행(‘10.2)】

- 고용보조금 지급 : 군내 거주자 20인 이상 상시고용하는 경우
 -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80만원 (1년)
-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: 군내 거주자 20인 이상 신규고용하는 경우
 -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지원(훈련기간 6월 범위내)
- *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노동부 등에 수혜 여부 확인 후 대상기업 확정

□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

-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‘고용우수기업’ 등 인증제 운영
- 자금지원,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부여
※경기도 첫 도입(‘09.6) : 34개업체 인증

□ 지원기반 마련

- 자금·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·개정(‘10.6)
- 희망근로사업으로 우수기업에 진입로 등 작업환경 개선(‘10.3~6)

과제 3 「청년창업 프로젝트」 확산

□ 청년창업 프로젝트 개요 [서울시 사례]

- 사업기간 : '10년 ~ '12년(3년간) ※사업주체 : 시도 및 시군구
- 사업규모 : 3년간 3,000명 예비창업가 육성
- 육성과정 : 예비 청년창업가 선발 → 체계적인 지원 → CEO육성
- 지원내용 : 창업 컨설팅, 공동사무실 지원 및 창업자금 알선 등
- 소요재원 : 691억원(서울시 자체예산)

[서울시 2009년 청년창업 실적]

- 1,021개 기업 선발 창업지원
- 총 438개 기업 : 사업자 등록, 약 1,727명 고용(기업당 약4명 고용)
- 매출실적 : 281개 기업, 월 38.6억원
- 성공사례 : 인캡(도자기의 현대화), 형아소프트(09년 삼성챌린지대회 최우수) 등

□ 확산방안

- 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표준 정책모델 정립 ('10.5)
 - 청년실업률 높은 대도시중심으로 단계적 확산
 - '1인 창조기업정책'(중기청)과 연계, 창조직업군 발굴·공표 등 정보제공
-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('10.7)
 -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기반 마련

[표준조례(안) 내용]

- 창업활성화 전담조직 구성, 상담 및 컨설팅 지원사항
- 창업활동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, 성과평가 및 차등지원 방식
- 지속적인 창업활성화를 위한 재원 대책, 추진체계 등

-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「국민제안 아이디어」 제안 공모
 - 창업아이템 발굴 활성화를 위한 '톡톡 아이디어 경진대회' 등 개최(연 2회)
 - 'Idea Biz Bank'(중기청)활용한 아이디어 발굴, 거래 활성화
- 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활용

IV

지원체계 및 제도 정비

1

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

□ 「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」 구성·운영

- 행안부, 시도, 230개 시군구 구성
 - ※ 자체 인력재배치 및 조정을 통한 인력·기능보강
- 일자리 성과창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□ 「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」 개최

- 행안부장관 주재 ‘일자리 창출 전략회의’ 운영(월1회)
 - 국가고용전략회의와 연계, 중앙정부의 고용정책 전파
 - 시도의 일자리 정책추진 독려, 우수 사례 확산 등

【지역일자리 창출회의 실적】

- 제1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: '10. 1. 21
 - 「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」설명 및 각 시도 통보
- 제2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: '10. 2. 19
 - 「2010년 지역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」지자체 이행상황 점검

- 자치단체장 주재 ‘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’ 운영(월1회)
 - 지역단위 ‘노·사·민·정 협의체’와 연계 운영

□ 지역일자리 추경 편성

- 일자리 재원마련위한 비상대책으로 상반기(4~5월)중 추경실시
- 재원은 경상경비·축제절감분,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활용

【경북 사례 : 일자리 「1만개 PLUS 프로젝트」】

- 경상경비, 행사비 등 10% 절감 → 일자리 재원 691억원 확보('10.3월 추경)
- 일자리 1만개 조기창출 → 계절적 실업증가 적극대응

□ 「일모아 시스템」 통합등록 운영

- (현황)지자체 일자리사업은 동시스템에 미등록(중앙정부 일자리만 등록)되어 통합적 일자리정보 제공 미흡
※ 일모아시스템 관리대상 사업('10) : 중앙정부 일자리사업 159개
- (개선)중앙·지방 일자리 통합등록 확대 및 관리대상 사업 정비로 일자리 정보서비스 강화('10.5)

□ 「Work-net」과 지자체 취업정보시스템 연계

- (현황)일부 지자체 Work-net과 별도의 취업정보시스템을 운용, 사용권한 제한 및 조회범위 한정(시군구)으로 지자체 취업지원 애로
- (개선)Work-net과 지자체 취업정보시스템과 연계강화, 읍면동에 Work-net 사용권한 부여 및 조회항목 확대

□ 지역 고용통계기반 강화

- (현황)시군별 고용통계는 연 1회만 지역 고용조사를 통해 통계(실업률, 고용률) 파악 * 시도단위는 월간
- 이에 따라, 시군구의 신속한 고용대책 수립 등에 한계
- (개선)분기별 시군단위 고용통계조사 확대('10.6월, 지자체)
- 표본가구추출 표본조사수 등 구체적 조사방안 마련 통계청과 협의('10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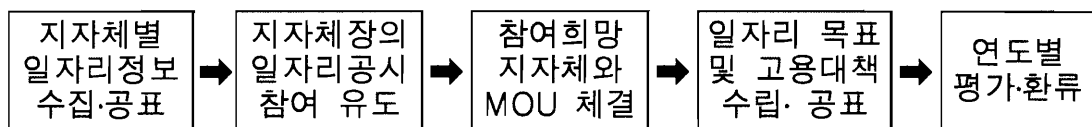
【고용통계 조사사례】

- 경기도 : 현재 18개 시군 고용조사 → 31개 시군으로 확대('10년)
- 경남 창원시(분기), 전북 전주시(분기), 군산시(반기) 고용조사 실시중

□ 「지역별 일자리 공시제」 도입

- 공시주체 : 지방자치단체장 (관리 : 노동부)
- 공시내용 : **일자리 조성목표 및 실적 등**
 - (목표) 취업자수 증가율, 고용률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율
 - (실적) 목표대비 일자리 조성수, 생산적 일자리 창출정도 등
- ※ 경기도 일자리 공시제 도입 : 노동부, 통계청과 협의하여 실시
- 공시결과 환류
 - 고용노력 정기적 점검·평가 및 **순위공개**(‘10년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)
 - 추진성과 연계하여 우수 지자체에 **행·재정적 인센티브** 제공

일자리 공시제 절차도



□ 지역일자리 성과창출 확산

- 상·하반기 지자체 성과평가, 경쟁체제 도입
 - 잘하는 지자체 집중지원(재정인센티브 지원 : 500억원)
- 【경기도 사례 : 시군별 평가】
 - (평가대상, 시기) 경기도내 시군, 상반기(7월), 하반기(12월) 평가
 - (평가분야) 국가, 도, 자체 및 민간지원 등 모든 일자리 사업
 - (인센티브) 시책추진비 사업비를 포함한 도비 보조금 차등지원
- ‘11년 국비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배정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
 - * 대상사업(예시) 중기정책자금(‘10년 3조1,355억원),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(‘10년 669억원), 사회적기업 육성(‘10년 1,487억원) 등
- 지역단위 「일자리 창출 보고대회」 정례적 개최(분기별)
 -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확산·전파
- 지자체-기업간 협력 강화
 - 일자리 창출협력 지자체-기업간 MOU 체결
 - 기업은, ‘1社 1 사회적기업’ 참여등 사회적 공헌 확산
 - 지자체는, 기업 애로사항 현장발굴·규제개선

참고

과제별 추진일정

과 제 명	추진기한	추진주체
① 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	'10.3~6.	행안부, 지자체
② Post-희망근로 : 「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」 추진	'10.7~12.	행안부, 지자체
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구조개선	연 중	총리실, 행안부, 노동부, 복지부 등
④ 「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」 육성	'10.9~12.	행안부, 지자체
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지자체 역할강화	연 중	행안부, 노동부, 지자체
⑥ 고용우수기업 지원 확대	연 중	행안부, 지자체
⑦ 「청년창업 프로젝트」 확산	연 중	행안부, 지자체
⑧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	연 중	행안부, 지자체
⑨ 지역일자리 추경 편성	'10.5.30	행안부, 지자체
⑩ 「일모아 시스템」 통합등록 운영	'10.5.31	행안부, 노동부, 지자체
⑪ 「Work-net」 과 지자체 취업정보시스템 연계	'10.6.30	행안부, 노동부, 지자체
⑫ 지역 고용통계기반 강화	'10.6.30	행안부, 노동부, 통계청, 지자체
⑬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	연 중	노동부, 행안부
⑭ 지역일자리 성과창출 확산	'10.12.31	행안부, 지자체

자 치 단 체 우 수 사 례

□ 서울특별시 : “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”

- 20~30대 예비창업자들에게 시가 시설, 장비,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청년실업해소

※ 사업자 등록 438개('09.6월 3,100명 지원 1,021명 선발)

□ 경기도 : “『경기일자리센터』 성공방정식”

- 220개 기관 일자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,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·연계 운영하여 상담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서비스제공

□ 구미시 : 「We Together 운동」

-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민정이 범시민협약을 체결하고, 시는 운전자금을 융자지원(이자 5% 시비로 지원)
- 364개사가 참여, 1,295명 고용창출

□ 전라남도 : “장흥군 무산김 주식회사

- 어민 주도로 주식회사를 설립, 생산·가공·유통 단계를 일원화,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(직접고용 40명, 간접고용 200명)
- 전국 최초로 산을 사용하지 않는(無酸) 김 양식을 시도하여 해양 생태계 복원